

# 광양항 카보타지 예외 '재검토' 중

〈외국선박의 연안운송 금지〉

### 도·군산항 등 이의 제기 따라... 군산항 전체 수출화물의 83%가 자동차 환적으로 피해 커

정부가 광양항에만 카보타지(외국 선박의 연안운송 금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8면)

이는 전북도와 군산항, 목포항 등이 해양수산부에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이의를 제기하고 강한 반대의 입장을 펼쳤에 따른 것으로 향후 군산항의 명운이 걸린 '카보타지' 관련 해수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군산항 자동차 환적화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전북도 및 군산시 관계자는 보도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향후 계획 현실화 여부 등 동향 파악을 위해 해수부를 방문했다.

그 결과 해수부는 최근 활성화하기 위한 카보타지 불을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광양항만 예외적으로 3

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이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군산항·목포항 등에서 이런 계획에 대해 강한 반발에 나서며 이의를 제기하고 군산항 자동차 환적화물 이 전북지역(군산) 경제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카보타지'는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 따라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항만 예외적으로 카보타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외국국적 선박에 대해 연안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된다. 이는 곧 다국적회사 화물선들에게 이익이 될

이가 반사적으로 국내선적 화물선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군산항의 환적자동차 처리가 주는 경제적 효과는 2014년 66억원이던 게 지난해는 120억을 넘고 올해도 160억원 이상이 예상 되는 등 군산항 전체 수출 화물에서 대부분을 차지(83%)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다.

따라서 광양항 카보타지 예외 적용은 군산항의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 업체의 파산은 물론 이는 곧 군산항 전체의 침체로 이어져 전북 지역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도 14일 성명을 내고 광양항 카보타지 예외 적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서부항운노조는 "그동안 환적화물의 유지에 노력해 군산항의 자동차 화물 취급량이 2013년 5만4000대에서 2014년 16만4000대, 2015년 23만4000대로 증가했으며, 이는 군산항 전체 수출화물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동차 취급 행반과 사전에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항만으로 몰량 몰아주기식의 카보타지를 시행한다면 현재 환적항으로 몰리기 역할하고 있는 군산항의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업체의 파산은 너무나 지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해수부 장관 면담 등 군산항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낙시어선 안전불감증 여전

### 군산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사고도 잇달아

낙시어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어업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쪽 약 2km지점에서 낙시꾼 2명이 탄 9.7톤급 어선 선장 A씨(38, 군산)를 선박직원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10시40분께 동일 해상에서 승객 7명이 탄 7.9톤급 낙시어선이 낙시관리 및 육성법(구명조끼 미착용) 위반 혐의로 해경에 단속했다.

최근 낙시꾼 20명이 타고 있던 낙시어선이 좌초돼 해경에 구조되는가 하면 4월에도 낙시어선과 어선이 충돌해 낙시꾼 2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안전은 외면한 채 이익만을 쫓는 일부 낙시어선업자들의 위험천만 영업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해경이 강력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선장과 운항 책임자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낙시어선이 정비소홀로 인해 바다에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된 사례는 최근 2달간 8건에 달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해 해경에 단속된 사례도 27건에 달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명조끼는 바다의 생명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속과 계도, 현장 홍보를 병행하면서 낙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호남권 정책협, '탄소섬유 CNG 보급 홍보' 등 협력 합의

### 서울~제주 고속철 건설·한빛원전 방사능 누출대비 등 3개 신규과제 추진키로

전북도의 탄소산업 관련 결실 중 하나인 탄소섬유 CNG 용기 사업이 전북지역 시내버스는 물론 광주·전남 시내버스에도 확대돼 진행될 전망이다.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상생을 통한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탄소섬유 CNG 보급 홍보' 등 신규 협력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정현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전주 전통문화연구원 수원에서 제9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3개의 신규과제 추진 및 8개의 기존 협력과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신규 협력과제는 ▲수도권과 제주도 국내의 관광객 분산과 서·남해안권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우 및 제주도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최첨단 신소재인 탄소섬유의 자동차 분야 적용 확대를 위한 탄소섬유 CNG 용기 장착 시내버스 보급 홍보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와 서·도민 보호 등이



14일 전주 전통문화연구원에서 호남권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지사(왼쪽)와 윤정현 광주시장·이낙연 전남지사(가운데)가 3건의 신규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 중 전북의 협력과제인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은 2014년 11월 전북도와 효성이 전주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할 때 맺은 MOU를 바탕으로 시작돼 지난해 말 결실을 맺은 사업으로 2015년 이를 활용한 시내버스 10대가 보급돼 있고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호남권 시·도지사들은 그동안 협력해온 과제들을 점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돼 차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8개 과제에 대해 지속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실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협력과제로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관 운영, 관광설명회 개최 등 홍보·마케팅을 공동 추진한 결과 2015년 호남권을 찾은 관광객이 7,500만 명을 기록, 2014년(6천 900만 명)보다 20% 늘었다.

이어 시·도립 공연예술단 교류의 경우 지난해 광주와 전북 예술단이 전남에서, 올해 5월 광주시립관현악단이 전북에서 공연했고, 9월 전남도립국악단이 전북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서해안지역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군산-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수서발 고속철도의 호남·전라선 증편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주 방문을 환영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호남권 3개 시·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장점을 극대화하고 발전에 나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협력과제가 잘 추진되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국립공원 주차장·휴게소 민간 위탁 늘린다

###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 발표

정부가 국립공원 시설운영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분야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용객의 안전한 탐방과 편의제공을 위해 국립공원 내 주차장과 휴게소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단순 시설물 관리 업무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인력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 등 민간위탁 시설을 현재 6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다. 주차장 13개와 휴게소 3개가 추가 위탁될 예정이다.

민간 위탁할 경우 주차료 등이 인상되지 않도록 '국립공원 수입집수규칙'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기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의 핵심적 기능을 강화하는 게 이번 기능 조정의 핵심"이라며 "시설물 관리 업무를 민간에 넘기고 이를 맡아왔던 직원들은 핵심 업무에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기관으로 흩어진 자연보전 관련조사·연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 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칭)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한다.

화학물질관리, 환경피해구제, 오염구제 등 분야에서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이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도 기능을 조정한다.

화학물질관리·토양오염조사·특성화대학원지원은 환경공단으로, 환경피해구제·환경산업통계·국제협력은 기술원으로 일원화한다.

교육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일원화도 추진된다. 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은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을 중복 운영 중이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사회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이 각각 운영 중인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은 사회진흥재단으로 업무를 넘긴다.

사회연공금단의 경영지원 인력은 축소하기로 했다. 사회연공금의 기금규모와 지급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원인력비중이 과도해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정영수 기자

### 여름방학스피치특강모집

####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권희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파견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사
- 한국스피치센터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 저서: '35원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